



## 일본 국토교통성, 이란산 원유 수송 유조선에 선박보험 제공

박정희 선임연구원

■ 유럽연합(EU)이 오는 7월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에 대한 재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제재조치를 가하면서 일본의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할 위기에 처함.<sup>1)</sup>

- 지난해 일본의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는 일본 원유수입량의 8.8%에 해당하는 1,800만kl이며, 일본 정유사의 80~90%가 유럽계 보험회사와 재보험 계약을 맺고 있음.
- 이번 조치에는 선주상호보험(P&I)을 비롯해 적하보험, 선박보험, 배상책임보험, 재보험 등 원유수송 보험의 모든 부문이 포함됨.
  - 특히, 유조선과 관련된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95%가 EU의 관할권에 있고 국제선주상호보험도 영국 런던에서 계약이 이뤄져 사실상 보험계약이나 갱신은 불가능한 현실임.
- 이번 제재조치로 100여 개의 대형 유조선사가 이란산 원유운송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76억 달러의 보험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특별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EU를 상대로 이란산 원유수출에 대한 선박보험 제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일본 정부가 직접 선박보험을 제공하게 된 것임.
  - 일본 국내법에 따르면 영해에 진입하려는 선박회사는 원유 유출 등의 사고 피해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선박보험은 일본 선주상호보험(P&I)이 제공하고 P&I측은 대형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1) 유럽연합의 대(對)이란 제재는 이란의 핵 개발 중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 등 6개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6월 18~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재개될 예정임.

- 일본 정부는 가장 빈번한 사고인 원유 유출 시 최대 10억 달러, 유조선의 충돌, 좌초, 폭발 등 중대사고 시에는 76억 달러의 선박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일본 정부는 EU의 제재조치가 발효되는 7월 1일까지 관련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 10월까지 적용을 제외할 것을 독일, 영국 등 EU 회원국에 요청함.
- 일본의 새로운 제재에 대한 적용 제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대표들의 만장일치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주요 2개 회원국 관계자들은 일본의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이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함.

(일본 국토교통성 보도자료 外, 6/11)